

푸틴 3기 정부 1년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과 한반도*

조정원**

| 목 차 |

I. 서론	III. 푸틴 3기 정부 1년의 동아시아 외교
II. 푸틴 3기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과 전략	IV. 한반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V. 결론 및 전망

| 논문요약 |

푸틴 3기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과 한반도 정책은 푸틴 1기, 2기 정부의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정책을 꾸준히 계승하고 있다. 또한 2008년 9월 12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메드베데프 총리가 강조했던 아시아와 유럽을 모두 중시하는 동방정책의 기조도 이어가고 있다. 극동시베리아 개발은 2009년 9월 중국의 동북진흥과의 연계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동력 진출, 일본, 한국과의 협력 추진으로 예전보다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는 ASEAN과 중국, 일본, 한국이 포함되는 ASEAN+3과 관련된 협력에 있어서 동아시아 정상회담과 G20, ASEAN 관련 대화 채널들의 활용 외에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놓지 못한다면 첫 1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도 2012년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바탕으로 한 현상 유지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영향력 제고에 필요한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음에 기인한다. 그로 인해 러시아의 대한반도 경제적, 외교적 정책 수단은 제한적이며 한반도에 별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413-B00001).

**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지 못하면 푸틴의 남은 임기 동안 동아시아,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끌어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 주제어: 푸틴 3기정부, 러시아, 외교 정책, 동아시아, 한반도

I. 서론

러시아연방공화국의 대통령을 8년 동안 역임했고 총리로 4년을 일했던 블라디미르 푸틴은 2012년 5월 7일부터 3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였다.¹⁾ 지난 8년의 대통령 임기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전임자인 보리스 옐친과 다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보리스 옐친은 임기 초반부터 미국과 서방 중심의 외교를 추진하였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과의 협력 강화, 한국 중심의 한반도 외교를 추진하였다. 그로 인해 구소련 시대의 파트너였던 북한의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서방과 한국 중심의 한반도 외교에서 러시아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옐친 대통령은 1996년 1월 예브게니 프리마코프를 코지레프의 후임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한 후 외교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프리마코프의 외교 정책의 핵심은 러시아의 유라시아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방정책(전방위지향적 유라시아주의 외교 노선)이었다. 프리마코프는 서방 중심 외교에서 잠시 소외되었던 중동, 북한을 중시하고 몽골과의 관계 회복을 추진하였다(Ko and Choi 2002, 45). 옐친의 후임으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푸틴은 프리마코프의 동방정책에서 보다 진전된 형태인 실용주의 성향의 전방위 외교정책을 표방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북한과 90년대 후반 관계가 냉각되었던 몽골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균형 외교를 추진하고자 하였다(Mikheev 2001, 320-350; 제성훈 2012, 110). 푸틴은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임기 첫 해부터 중국,

1) 블라디미르 푸틴의 두 차례 대통령 재임 기간: 2000. 5. 7 - 2008. 5. 7, 총리 재임 기간: 2008. 5. 8 - 2012. 5. 7.

북한과의 협력을 보다 비중 있게 추진했다. 2000년 2월 북·러 신우호조약을 체결하여 북한과의 군사안보 분야 협력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동년 7월 10일에 당시 이고르 이바노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러시아의 새 외교정책 개념’에서는 프리마코프의 동방정책을 계승하고 미국의 독단적 대외 전략에 대한 경계, 아시아와의 관계를 강조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동년 8월에 푸틴 대통령은 우리나라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였다(홍완석 2001, 346). 3개월 후인 동년 11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하고 당시 몽골 대통령이었던 바가반디와 정상회담을 갖고 구소련 시기의 협력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였다(제성훈 2010, 181). 그 이후에도 푸틴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일본, 한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 몽골과의 협력에도 역량을 집중하였다. 아울러 베트남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도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옐친 집권 기간의 급진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국내 경제의 쇠퇴는 푸틴 집권 기간 동안 러시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제한하였다(Wishinick 2002).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는 한반도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서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였다(강봉구 2004, 13-14). 또한 2007년 연방정부 외교부의 “러시아연방정부 외교정책의 재검토”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한반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김유은 2010, 124). 특히 남북러 가스관 건설과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철도 연결 논의를 통해 한반도에서 영향력 제고를 시도하였다. 2011년에는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여하면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간 협력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은 소비에트 시기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Yoshinori 2006). 그렇다면 세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정책 기조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가?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가능성은 없는가? 현재까지 보여 준 푸틴 3기의 한반도 정책은 러시아의 대한반도 영향력 제고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인가? 이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고에서는 푸틴 3기 정부가 시작된 2012년 5월 8일부터 2013년 6월까지 첫 1년 동안의 동아시아 외교 정

책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동북 아시아 외교에서 핵심인 중국, 일본, 몽골과의 관계, 한반도 정책을 연구 하고자 한다. 또한 러시아의 동남아 외교에서의 중요한 두 축인 베트남과 기타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관계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활용 하고자 하는 문건은 2013년 2월 12일에 러시아 외교부가 발표한 “러시아 연방 외교정책의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이다.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개념(이하 외교정책의 개념)”은 러시아 외교부가 4년 간격으로 발표하고 연방정부의 외교 정책의 중점 사항들을 소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정책의 개념”은 발표될 때마다 국내외에서 향후 러시아 외교 정책의 방향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2013년 2월의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개념은 푸틴 3기 정부 외교의 방향을 예측하고 계획의 실행 여부를 검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나온 “외교정책의 개념”에서는 2장 현재 세계에서 러시아 외교정책의 6항에서 서방의 국제정치경제 지배력이 감소하고 동방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힘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아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외교정책의 개념”에서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지를 살펴보고 푸틴 3기 정부 첫 1년 동안의 활동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의 러시아의 동아시아 대외관계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동아시아, 대한반도 영향력 제고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푸틴 3기의 대러시아 외교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II. 푸틴 정부 3기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과 전략

1.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개념과 동아시아

1) 아태 지역의 중요성 강조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의 4장 75항에서 러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러시아는 아태 지역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국제 질서의 변화에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태 지역 국가들이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 발전과 지역의 안보 질서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러시아는 푸틴 3기가 시작된 지 4개월 후인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Trenin et al 2013, 14). 그 이후에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활동을 늘리고 있다.

2) 계속되는 다자주의 협력 시도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4장 지역의 중점 사항들의 75항, 78항에 언급된 다자주의 협력 관련 내용들이다. 4장 75항에서 러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다자적 기초 하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4장 78항에서 러시아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s, EAS)을 동북아시아 안보 관련 전략 대화의 메인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메드베데프 대통령, 푸틴 총리의 재임 기간인 2011년 11월 미국과 함께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또한 APEC 포럼과 ASEAN-러시

아 대화, 아세안 지역포럼과 같은 대화 채널을 통해 지역 내에서의 협력과 노력이 뒷받침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83항에서는 아태 지역의 새로운 안보 질서 확립을 위해 동북아시아를 중시할 것임을 명기하였다. 이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안보 협력과 평화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안보 메커니즘 건설을 추진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푸틴 3기 정부가 동아시아의 현존하는 대화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내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국익의 제고를 시도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구소련 시기 브레즈네프 서기장의 재임 시기부터 주장했던 다자주의 협력 방식을 활용하고자 함을 입증하고 있다.²⁾

2. 동아시아 외교 전략 및 분석 쟁점

1) 극동시베리아 개발: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현황과 문제점

메드베데프 대통령-푸틴 총리의 쌍두 체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극동시베리아 개발은 푸틴 3기에도 동아시아 정책의 중점 사항으로 언급되면서 중시되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는 “러시아 외교정책의 개념” 4장 지역의 중점 사항들의 75항에서 아태 지역 협력 강화와 극동시베리아 경제 발전을 병행할 것임을 명기하였다. 이를 위해 동년 동월 러시아 연방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빅토르 이사예프 극동개발부 장관을 파견하면서 우리나라의 보다 적극적인 극동시베리아 개발 참여에 대한 신호를 보낸 바 있다. 그 이후 중국, 일본과의 협력 추진에 있어서도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 한국 간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나 어려움이 남아 있다. 러시아와 중국 간에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중국 이민, 투자 급증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지역 개발 과정에

2) 주승호 미네소타대 정치학과 교수가 2013년 7월 12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콜로키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기부터 동유럽,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와는 달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 중국에 비해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소련은 브레즈네프 서기장 재임 시기부터 다자주의를 선호해 왔다.”

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는 개발 과정에서 현지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구체적이지 않고 관련 법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투자 증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극동 시베리아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와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현황과 쟁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중국, 일본, 몽골과의 협력 현황과 쟁점

푸틴 3기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역내 국가 중에 어느 나라와 협력에 비중을 둘 것인가이다. 협력의 대상으로서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언급된 나라는 중국이다.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의 4장 79항에는 중국, 인도와의 우호 관계 발전은 러시아 외교 정책 중점 사항들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82항에서는 중국, 인도와의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효율적인 협력을 메커니즘 건설도 중시할 것임을 명기하였다. 이는 과거 프리마코프가 제안했던 러시아, 중국, 인도 3각 협력의 틀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접근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중국 외에 동아시아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몽골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 푸틴 총리 재임 기간이었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북방 4개 도서 문제와 그 이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현지 방문, 러시아 전투기의 출현으로 인해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었다. 그로 인해 동년 7월 2일 하바로프스크에서의 아태 국가들과의 협력회의에서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논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기도 했다 (문정인/서승원 2013, 327). 그러한 일본을 경시하는 분위기는 푸틴 3기 동아시아 전략에서는 수정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4장 85항에서 러시아는 일본과의 우호 협력과 다차원적 관계 증진, 다자간 협력 등을 추진하며 미해결된 문제들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명기하였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소비에트 시기부터 자원 협력과 동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몽골을 중시했다. 러

시아 외교 정책의 개념에서도 이러한 기초를 반영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4장 86항에서 러시아는 몽골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증진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와 일본, 러시아와 몽골과의 협력 추진 과정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거나 새롭게 등장한 쟁점들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와 중국 간에는 러시아 연방정부의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중국 자본, 이민에 대한 의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중국 이민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북방 4개 섬 문제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조정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몽골 간에는 몽골의 국내 자원 개발 과정에서의 외국 자본 유입에 대한 통제로 인해 러시아의 몽골 자원 투자 확대를 막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러·중 관계와 러·일 관계, 러·몽 관계의 현황과 쟁점들에 대하여 논의하게 될 것이다.

3) 동남아: 베트남 중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2차 대전이 종결된 후부터 냉전 시대까지 구소련의 동남아 전략에서의 포인트는 베트남이었다. 이는 베트남이 동남아와 중국, 인도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지정학적 위치는 공산주의의 국제적 확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의 견제에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소련은 이러한 베트남의 장점을 활용하고자 1979년 캄란만에 해군 기지를 설치하였다. 또한 베트남 전쟁 기간 중에 나진항을 통해 북베트남 사회주의 반군에게 전략 물자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구소련이 해체된 후에도 러시아연방공화국은 푸틴 1기의 2번째 해인 2001년 9월까지 캄란만 해군 기지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2001년 10월에 해군 기지를 철수한 이후 러시아는 베트남과 동남아의 군사, 안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메드베데프 대통령 푸틴 총리 체제인 2010년 러시아는 베트남과 캄란만 해군 기지 재사용 논의를 추진하면서 동남아로 다시 진출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푸틴 3기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푸틴은 베트남을 중

시하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푸틴의 생각은 “러시아 외교 정책의 개념” 4장 87항에 명시되어 있다(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2013). 그러나 러시아와 베트남은 캄란만 해군, 공군 기지 재설치 여부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투자 확대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푸틴 3기 정부 1년간의 동남아 지역에서의 협력 현황과 러시아의 동남아 지역 외교 정책과 전략에 있어서의 쟁점들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4) 한반도에서의 협력, 영향력 제고 시도와 한계

푸틴 3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방향은 “러시아 외교 정책의 개념” 4장 84항에 언급되어 있다. 4장 84항에는 평화 유지에 필수적인 지역 발전과 남북 대화, 경제 협력을 위한 한국, 북한과의 협력을 유지할 것임을 명기하였다.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와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한반도의 점진적 비핵화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러시아는 미국 외에 중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가능한 다자주의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러시아만의 역량으로는 미국과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부상하는 중국에 비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번 외교정책의 개념에서도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극동 시베리아 개발과 지역 내 각종 대화 채널 활용 외에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 러시아의 대한반도 영향력을 제고 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는 “러시아 외교 정책의 개념”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북한에 제시하였다. 2012년 11월 러시아는 북한에 대하여 구소련 시기의 부채 조정과 잔여 부채의 원조 전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는 지난 1년 동안 문제 해결이나 조정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러시아의 지난 1년 동안의 한반도에서의 협력과 영향력 제

고 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왜 러시아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은 강화되지 않는 지에 대해서도 연구하게 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개념”에서 언급된 동아시아 외교 정책과 전략의 국가, 지역별 핵심 쟁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러시아의 동아시아 외교전략 및 쟁점

지역	국가	추진전략	쟁점
동북아	중국	우호 관계 발전 경제, 안보 협력 강화 극동 시베리아 경제 개발	극동 시베리아 개발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 심화에 따른 러시아 연방정부의 우려
	일본	우호 협력과 다차원적 관계 증진 다자간 협력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북방 4개 섬 문제
	몽골	전통적 우호 관계 증진	몽골 자원산업의 러시아 자본 유입 통제
동남아	베트남	경제,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동남아로의 복귀”에 있어서 전략적 거점	캄란만 러시아 공군, 해군 기지 재설치 여부
	기타 아세안	동아시아정상회의: 다자주의 협력 시도	러시아의 투자 증진

한 반 도	한국	극동시베리아 개발 참여 유도 6자 회담과 유엔 안보리 틀에 서의 북핵문제 해결 시도: 다 자주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 과정 에서의 한국 기업, 자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투자 인센티브 부재
	북한	북한의 구소련 시기 부채 탕 감 6자 회담과 유엔 안보리 틀에 서의 북핵문제 해결 시도: 다 자주의	북한 핵 문제

Ⅲ. 푸틴 3기 정부 1년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

1. 중국, 일본, 몽골과의 관계

1) 중국: 제5세대 지도부와의 이견 조정과 협력 강화

① 러·중 협력 재추진의 원인과 현황

푸틴 정부 3기가 출범한 후 1달이 지난 2013년 6월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서해와 중국 산둥 지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양국의 협력은 별다른 이견 없이 강화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2년 8월에는 메드베데프 총리와 빅토르 이샤예프 극동개발부 장관이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중국 이민자들의 증가에 대한 경계 심리를 드러낸 바 있다. 특히 빅토르 이샤예프 극동개발부 장관은 중국이 과거 소비에트 시기 소련이 중국 국가건설 과정에 베풀었던 은혜를 잊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多維新聞』, 2012年 8月 16日). 또한 2012년이 끝날 때까지 양국 간의 에너지 협력 확대의 걸림돌이었던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대중국 공급 가격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

었다. 그러나 양국 간의 무역은 활발하게 진행되어 2012년 881억 6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였다(『新華網』, 2013年 4月 16日). 이처럼 양국의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는 두 나라의 무역 구조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러시아의 각종 광물 자원과 석유, 목재는 각종 공산품 제조, 생산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2> 러시아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

품목	2012년 수출액 (100만 달러)	2011년 수출액 (100만 달러)	2011년 대비 증감 (%)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광물 자원 및 연료 (석유 포함)	13,496	15,166	-11	56.1
광석 채련 관련 상품	2,144	2,422	-11.5	8.9
목재, 목탄	2,061	2,585	-20.3	8.6
비료	1,574	1,080	45.8	6.5
어류, 수산물	923	1,059	12.9	3.8

자료: (商務部綜合司 商務部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 2013, 14)

러시아는 자국 제품보다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중국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표 3> 러시아의 대중국 주요 수입 품목

품목	2012년 수출액 (100만 달러)	2011년 수출액 (100만 달러)	2011년 대비 증감 (%)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	---------------------------	---------------------------	--------------------	-------------------------------

원자로,보일러, 기계류 및 부품	12,223	11,274	8.4	24
전기, 전자 제품, 음악 영상 설비 및 부품	10,795	9,963	8.4	21.2
구두, 신발, 레그가드와 부품	2,706	2,307	17.3	5.3
자동차, 자동차 부품	2,594	1,806	43.7	5.1
플라스틱 제품	1,787	1,639	9	3.5
완구, 게임, 운동 용품	1,677	1,072	56.4	3.3
의류 (편직, 뜨개 제외)	1,653	1,471	12.4	3.2
의류 (편직, 뜨개)	1,547	1,265	22.3	3

자료: (商務部綜合司 商務部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 2013, 15)

특히 전기, 전자 제품과 기계류, 플라스틱 제품, 완구와 의류, 구두와 신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모두 2011년보다 8% 이상 수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무역 특성은 푸틴이 3기 임기 시작과 동시에 극동개발부를 신설하면서 중시하고 있는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3)푸틴은 이처럼 러시아에게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주는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을 2013년에 접어들면서 재추진하기 시작했다. 동년 2월에 나온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

3) 러시아 시베리아 세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4분기 시베리아관구가 중국에 수출한 품목은 각종 자원과 금속, 금속 제품, 목재이다. 반면에 중국은 각종 공산품과 기계설비, 자동차를 비롯한 교통 수단 등을 수출하였다(駐叶卡捷琳堡總領館經商室 2013).

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에서 중국, 인도와의 상호 경제, 외교 협력 강화와 이를 위한 메커니즘 구축, 극동 시베리아 경제 개발을 언급한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 3월 14일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제5세대 지도부가 등장한 이후 양국의 협력은 푸틴 1기, 2기와 메드베데프 대통령 임기와 비교했을 때보다 심화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013년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 기간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2018년부터 30년 동안 38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 수출 계약과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동부 노선 가스관 건설에 합의했다(Газпром 2013). 또한 2012년까지 매년 1,500만 톤이었던 러시아산 원유의 중국 공급량을 단계적으로 3,100만 톤까지 늘리고 중국은 매년 러시아에게 2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다.⁴⁾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외국 지도자에게는 최초로 러시아 국방부 작전통제센터를 공개 하였다(RT 2013). 작전통제센터 공개 이후 양국은 중국에 러시아산 수호이 35 전투기 24대, 아무르급 함정 4대 수출, “평화사명 2013”을 비롯한 군사훈련 일정도 확정했다(Krainova, Natalya Moscow Times 2013). 특히 수호이 35 전투기와 아무르급 함정 수출은 러시아가 그동안 중국에 최신 무기 수출을 제한했던 기초를 변경한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중국과의 군사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이 끝난 이후에도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은 활성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3년 7월 5일부터 12일까지 러시아 해군과 중국 해군은 동해 등지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동년 8월 중순에는 양국에서 600명씩 참가하는 대테러 합동 군사훈련을 러시아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⁵⁾ 이러한 협력 강화는 러시아와 중국의 수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러시아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유럽 시장에서의 에너지 수요 감소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출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판매 시장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중국을 통해 동북아로 진출할 루트를 마련하는 게 중요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 외교 안

4) 中新財經報道: <http://finance.chinanews.com/ny/2013/05-31/4876716.shtml>. (2013년 5월 31일 검색)

5) BBC: <http://www.bbc.co.uk>. (2013년 5월 7일 검색)

보 분야에서의 영향력 회복에 있어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부상하는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했다. 중국과의 공조가 있어야만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응할 역량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국내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와 천연가스 수입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극동시베리아 개발 과정에서 중국의 투자 증가, 중국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러시아의 경계 심리와 불만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바마의 2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구체화되고 있는 미군의 아시아로의 회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절실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기만큼 군사적 역량을 평가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본부가 있는 태평양 함대를 중심으로 한 해군 전력과 육군, 공군 전력은 중국의 역량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은 제5세대 지도부 등장 이후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 기간 동안 보다 구체적인 성의와 노력을 보여 주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취임 이후 최초 방문지를 러시아로 선택하였다. 방문 기간 동안 러시아와의 신규 에너지 프로젝트들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중국 국가개발은행의 확실한 금융 지원을 제시하였다.⁶⁾ 또한 러시아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러시아 방문 기간 중 뜨기모 강연과 러시아의 중국 전문가들과의 회동을 통해 자신과 많은 중국인들이 러시아의 문학 작품과 문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감동받았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은 양국의 경제, 외교안보 분야의 수요와 중국의 노력으로 러·중 관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② 남아 있는 문제: 극동시베리아의 중국 의존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

양국 협력이 심화되는 데 남아 있는 변수는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중국 투자와 이민자들의 증가로 인해 러시아가 느끼는 부담이다. 현재까지 극

6) Brookings: <http://www.brookings.edu>. (2013년 4월 8일 검색)

동 관구에서 한국과 일본의 투자가 늘고 있고 중국 이민자들의 유입도 러시아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에 시베리아 관구에서는 중국의 투자가 가장 많고 다른 나라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들어오고 있다. 극동시베리아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어느 나라의 투자라도 받아 들여야 지역 경제 개발과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투자 유입을 대체로 선호하는 편이다. 반면에 러시아 연방정부는 극동 관구와 시베리아 관구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부산일보』, 2013년 7월 4일). 그러나 시베리아 관구는 극동 지역보다 더 추운 날씨와 부실한 사회경제 인프라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베리아의 경우에는 중국 외에는 다른 나라 기업들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 노동력의 의존이 높아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일본: 아베 2기 정권과의 협력 강화

① 러·일 협력 추진의 계기와 현황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메드베데프 대통령 푸틴 총리의 재임 중인 2010년부터 북방 4개 도서 문제로 인해 악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푸틴 총리는 2011년 3월 푸틴은 일본과의 영토 협상 재개와 경제 협력 강화를 언급하였다(문정인/서승원 2013, 328). 또한 동년 10월 3일 알렉세이 밀러 가스프롬 사장과의 접견에서 가스프롬의 활동 확대를 위해 일본, 한국,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지시했다(АРХИВ САЙТА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В.В.ПУТИНА 2011). 그러나 당시 노다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민주당 정권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양국 관계는 동년 11월 민주당 정권이 종료될 때까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흐름은 푸틴 3기가 시작된 2012년 5월 8일부터 12월 까지도 계속되었다. 이는 당시 일본의 집권 세력이었던 노다 총리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외교적 무능, 메드베데프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북방

4개 섬 방문과 러시아 전투기의 일본 부근 공해 비행으로 인한 갈등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러나 푸틴 3기가 시작된 지 9개월 후에 나온 러시아 외교정책의 개념에서 일본과의 협력 증진이 언급되고 아베 2기 내각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2013년 4월 29일 아베 일본 총리와 푸틴 대통령의 모스크바 정상 회담에서 두 나라는 새로운 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우선 안보 분야에서는 2+2 안보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하였다. 이번에 합의한 2+2 안보협의체는 2차 대전 승진국인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와 전범 국가인 일본 간의 안보 협력 시도라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러시아는 현재까지 중국이나 북한과는 안보협력체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2+2 안보협의체를 향후 러시아의 동아시아 안보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 간의 문화센터 운영, 에너지와 교통운송, 금융, 투자은행, 보험을 중심으로 15개의 경제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협의서에 서명하였다(*The Asahi Shimbun Asia & Japan Watch*, April 30, 2013). 또한 러시아, 일본과의 러시아와 일본의 협력 증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북방 4개 섬인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의 영유권 문제에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 지체되었던 러시아-일본과의 평화 조약 체결 추진과 이를 위한 쿠릴열도의 4개 섬 문제에 대한 타협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2년 10월 푸틴 대통령은 아사히신문 요시후미 와카히마 편집장과 인터뷰에서 유도에서의 “히키와케(무승부)” 방식처럼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Akihiro 2013). 그 제안은 북방 4개 섬을 러시아와 일본이 같은 크기로 2등분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2등분 방식은 러시아가 <그림 1>에서와 같이 4개 섬 중에서 전략적 가치가 가장 큰 에토로후의 80%를 제외한 나머지 영토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림 1>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쿠릴열도 4개섬 2등분 개념도
 자료: (朝日新聞; 박민희 2013)

푸틴의 제안은 1956년 소련-일본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4개 섬을 2등분 하자는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⁷⁾러시아가 이러한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대일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다. 우선 상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유럽 지역의 러시아 에너지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으로의 에너지 수출과 협력이 필요하다. 반면에 일본은 천연 자원이 부족하며 특히 수요가 많은 석유, 천연가스 수입은 지리적으로 그렇게 가깝지 않은 중동에 의존해 왔다. 석유, 천연가스의 중동 의존도를 줄이는 데 지리적으로 비교적 인접한 러시아의 자원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012년 러시아와 일본의 무역액은 334억 8,233만 4천 달러인데 그 중 수출은 126억 4,133만 9천 달러(전체 수출의 1.6%), 수입은 208억 4,099만 5천 달러(전체 수입의 2.4%)로 아직까지 일본의 전체 수출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JETRO *Trade and Investment Statistics* 2013). 그렇지만 일본에는 1억 2천 7백여만명

7) 2001년 3월의 푸틴과 당시 일본 총리였던 모리의 이르쿠츠크 공동 성명에서 1956년 소련-일본 공동선언이 평화협상의 출발점임을 명시하였다. 푸틴이 대통령으로 복귀하기 2일 전인 2013년 5월 6일에는 당시 일본 외무상이었던 겐바가 이르쿠츠크 성명이 일본 정부의 생각과 충돌하지 않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의 인구와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으로 인해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자원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존재한다. 이는 러시아 자원을 수출할 수 있는 큰 시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석유화학, 정유 분야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일본은 우수한 기술과 자본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낮은 러시아와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일본은 국내 경제의 침체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러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베 총리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 도시바, 미쯔비시를 비롯한 일본 주요 기업의 고위층 100여명이 경제사절단으로 수행하였다(*The Asahi Shimbun Asia & Japan Watch*, April 30, 2013). 이는 일본 경제계가 대륙으로의 투자와 경제 활동 강화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2012년에 대러시아 해외직접투자를 대폭 늘린 바 있다. 일본의 2012년 일본의 대러시아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7억 5천 7백만 달러로 2011년(3억 3천 9백만 달러)보다 2.2배가 증가하였다(JETRO *Trade and Investment Statistics* 2013). <표 3>에 나온 바와 같이 일본 기업들은 풍부한 보유 자금을 바탕으로 극동 지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표 3> 일본 기업들이 검토, 추진 중인 러시아 극동 지역 투자 계획

투자 프로젝트	참여 기업	추진 현황
블라디보스톡 LNG 터미널 건설	일본극동가스회사 (컨소시엄)	가즈프롬과 2012년 사업 타당성 사전조사 계약 완료
나훗카 나프타 터미널 건설	미쓰이물산	로스네프트와 건설 수주를 위한 논의 진행
극동 항만 곡물 터미널 건설	이토추상사, 마루베니상사	건설 수주를 위한 시장 조사 진행

바이칼-아무르 철도 현대화	미정	러시안 레일웨이, JBIC(일본국제협력은행)의 자금 지원을 통한 투자 검토
----------------	----	---

자료: (오영일 2013, 58-59)

<표 1>의 투자 프로젝트들 중에서 항만 곡물 터미널 건설을 제외하고는 극동 지역의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다. 그 중 바이칼-아무르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는 시베리아와 사하공화국의 석탄, 철광석을 아시아 수출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Itar-tass 2013년 5월 20일 검색). 블라디보스톡 LNG 터미널 건설은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 천연가스를 저장하여 일본과 동아시아로 운송하는 데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인 일본은 수입선 다변화와 중동과 인도네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실행될 경우 향후 일본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2012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2) 남아 있는 문제: 북방 4개 섬 문제에 대한 이견

극동시베리아의 천연 자원과 지역 경제 개발은 양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두 나라의 관계를 강화시켜 줄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문제에 대한 타협과 평화협정 체결이 푸틴 3기 임기 내에 가능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는 일본 정부의 영토 문제와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한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한 태도, 언행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쿠릴열도의 4개 섬 문제에 있어서는 2000년과 2006년에는 러시아와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에토로후(러시아명 이투루프)를 제외한 3개 섬을 먼저 반환하거나 4개를 모두 돌려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영토 문제에 강경한 보수파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石川陽平 2013).



<그림 2> 북방 4개 섬 관련 일본의 주요 제안 (1998-2013)

자료: (『동아일보』, 2013년 4월 3일)

아베 총리의 러시아 방문이 끝난 후에도 일본 정부는 2차 대전 기간 중의 역사 문제, 영토 문제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 일본이 푸틴 대통령의 북방 4개 섬 이등분 제안에 보다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푸틴 3기 임기 내에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3) 몽골

① 러·몽 협력의 현황

러시아는 몽골과의 관계에 있어서 엘벡도르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정권과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2년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울란바토르에서 양국 정부의 16차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

회를 개최하였다. 공동위원회에서 러시아와 몽골은 양국의 광물 분야 합자 기업인 에르데넬의 경영 개선, 울란바토르 철도에 대한 2억 5천만 루블 투자, 러시아의 대몽골 구제역 백신 지원 등을 논의하였다.⁸⁾ 러시아는 몽골의 자원과 상품 수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몽골의 철도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기에 몽골의 광물 철도망을 건설하였고 지금도 수익의 절반을 국유 기업인 러시아레일웨이 가 가져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에 대한 철로 증설을 추진하기에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러시아의 철로 증설 방안에 대해 몽골 정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또한 2013년 3월에는 에너지 운송을 담당하는 러시아 국유 기업 트란스네프찌가 러시아 원유의 중국 서부로의 공급을 위해 몽골을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新華能网』, 2013年 4月 30日).

② 양국 관계의 쟁점: 자원 개발 참여에 대한 이견

러시아와 몽골의 경제 협력에서 러시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몽골 국내 자원 개발이다. 그러나 최근 양국 간의 몽골 국내 자원 개발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12년 5월에 몽골 의회가 자원과 미디어, 금융 산업에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의 지분을 49%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Batbuyan 2013, 1). 이는 몽골이 금, 구리, 석탄을 비롯한 적극적 광물 자원 개발로 2011년 17%, 2012년 1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중국, 러시아 자본이 과다하게 진출하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매일경제』, 2013년 6월 27일). 그로 인해 러시아의 국유 기업들이 석탄을 비롯한 광물 자원 투자에서 지분과 발언권을 제한받게 되었다.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 국유 기업들의 투자 제한은 양국 협력이 심화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8) Embass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Mongolia: <http://www.mongolia.mid.ru>. (2013년 6월 27일 검색)

2. 동남아

러시아는 메드베데프 대통령, 푸틴 총리 체제였던 2011년 동아시아정상 회의에 참석하면서 외교, 경제 분야에서 동남아시아를 다시 중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푸틴 3기 첫 1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의 외교를 다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은 “외교정책의 개념”에서 언급한 아태 지역의 중요성, 경제 협력과 상호의존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중심의 동아시아 외교의 폭을 남쪽으로 넓히면서 앞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로서 더 많은 활동을 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푸틴 3기의 동남아시아 외교 정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구소련 시기의 전략적 파트너였던 베트남과의 관계,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모임인 아세안과의 협력이다.

1) 베트남

① 러시아 - 베트남 관계의 현황

푸틴 3기 정부의 첫 1년 동안 러시아는 베트남과 경제, 전통 안보,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러시아와 베트남의 무역액은 2012년 36억달러를 기록하여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표 4> 러시아 - 베트남 무역액 (2006 - 2012)

년도	무역액 (억달러)	무역액 증감률 (%)	베트남의 대러시아 수출액 (억달러)	러시아의 대베트남 수출액 (억달러)
2006	8.6997	-14.7	4.1321	4.5676
2007	10.1057	16.2	4.5845	5.5212
2008	16.4152	62.4	6.7195	9.6957

2009	18,2962	11.5	4,1489	14,1473
2010	18,2877	-0.99	8,297	9,9907
2011	19,81	8.1	12,87	6,94
2012	36	9	23	13

자료: <http://cn.news.gov.vn>. (2013년 6월 20일 검색)

상술한 바와 같은 협력 계획들이 실현되면 양국의 무역액은 2015년에 70억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연합뉴스, 2013년 5월 27일). 2013년에는 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의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년 5월 15일에 닝위엔 탄 등 베트남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 기간 중에 러시아와 베트남은 석유, 천연가스 협력 관련 3건의 협의회서에서 서명하였다. 협의회서에서 양국은 베트남의 국유 석유기업인 페트로베트남과 가스프롬 간의 석유, 천연가스 채굴과 개발, 양국 간의 합자 기업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⁹⁾ 전통 안보에 있어서 러시아는 베트남과 과거 구소련 해군이 사용하던 캄란만 공군, 해군기지의 부활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2012년 7월 러시아는 베트남과 캄란만에 러시아 선박수리기지 설치에 합의하였다(『人民网』, 2012년 7월 30일). 또한 러시아는 베트남에 러시아산 디젤 잠수함 2척을 수출하고 베트남 해군의 잠수함 부대 창설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동남아시아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반출하였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사업 협력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2년 11월 7일 메드베데프 총리와 응웬 쩐 중 베트남 총리와의 회담에서 베트남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베트남에 100억 달러 이상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¹⁰⁾이날 양국 총리의 회담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자유무역지역 설치 협상의 시작,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관세동맹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¹¹⁾ 이러한 조치들은 러시아가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 복귀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9) 中國石化新聞網: <http://www.sinopecnews.com>. (2013년 5월 16일 검색)

10) 베트남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전체 발전 비중의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11) Thanh Nien News :

<http://www.thanhniennews.com/2010/pages/20121106-medvedev-says-russia-wants-stronger-military-relation-with-vietnam.aspx>. (2013년 6월 30일 검색)

러시아와 베트남은 이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는 안보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협력이 강화되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베트남 경제의 발전으로 러시아에게 새로운 자원, 무기 수출 시장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베트남의 지리적 위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을 견제하고 지역에서 영향력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② 러시아-베트남 관계의 쟁점: 캄란만 러시아군 기지 재설치 여부

러시아는 베트남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군의 캄란만 복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베트남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 베트남 정부가 러시아의 공군기지, 해군기지의 캄란만 재설치 여부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양국 정부가 메드베데프 대통령-푸틴 총리 재임 중에 논의를 시작하였지만 아직까지 상호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데는 베트남의 러시아, 중국,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전략적 어려움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가 전략적 요충지인 캄란만에 러시아 군기지 재설치를 허용하면 오바마 2기 정부 하에서 아시아로의 복귀를 시도하는 미군 전력과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중국의 심기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 문제로 대립하고 있지만 중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와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

2)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 회원국들

① 대화 채널을 활용한 경제 협력

러시아는 푸틴 3기의 첫 1년을 아세안(ASEAN) 회원국들과 경제 무역

협력 로드맵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2년 10월에 합의, 완성된 로드맵에서는 에너지와 중소기업 발전, 항공 운송,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러시아와 동남아 국가들의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2010년 러시아와 아세안 국가들 간의 무역액은 90억 6천만 달러에서 2011년 139억 7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¹²⁾ 이 중 베트남과의 무역액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9개 회원국들과 러시아의 무역액은 2010년 71억 6,123만 달러, 2011년 119억 8,900만 달러로 1년 사이에 48억 2,777만 달러가 늘어났다. 이러한 무역액 증가가 발생한 데는 러시아의 자원과 동남아에서 제조된 공산품의 수출입 구조가 상호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양측의 상호 투자도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2년 러시아가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투자액은 22억 달러였다. 아세안 국가들은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에 14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양측의 투자는 수요가 가장 많은 에너지, 광물자원, 기초설비 등에 집중되고 있다.¹³⁾ 2013년 3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11차 러시아-아세안 공동협력위원회 회의에서는 러시아-아세안 청년 회의, 러시아-아세안 비즈니스 포럼 추진, 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2005-2015) 로드맵의 현황 점검이 이뤄졌다. 동년 5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아세안 청년회의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므기모 아세안 센터 빅터 섬스키 소장은 아세안과의 경제, 사회,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Chongkittavorn 2013). 또한 러시아-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논의를 희망하며 베트남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관세동맹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도 언급하였다. 그로부터 1달 여 후인 동년 6월 22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아세안 비즈니스 정상회담에서는 에너지, 화물 운송, 북극 노선 개발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안보 분야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아세안 국가들과의 다자안보 협약을 제안한 바 있다(Chongkittavorn 2013). 동남아 국가들과의 다자안보체제 수립은 구소련 시기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1969년에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내놓았던 제안이었다(Nogee and Donaldson 1995, 245-246). 이 제안을

12) ASEAN: <http://www.asean.org>. (2013년 6월 28일 검색)

13) 人民网: <http://world.people.com.cn>. (2013년 6월 30일 검색)

푸틴이 다시 내놓은 것은 브레즈네프 시기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에서 단독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푸틴 3기의 동남아 국가들과의 다자안보체제 제안은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견제의 대상이 미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브레즈네프 시기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2013년 6월까지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② 러시아-아세안 협력의 문제점

러시아는 푸틴 3기 정부 1년 동안 아세안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자 노력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아세안 국가들에게 대한 영향력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러시아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어서 러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과감한 투자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에 나온 아세안과의 무역액에 있어서 러시아는 중국, 일본, 미국, 한국과 비교했을 때 액수가 상당히 적다. 이는 러시아가 아세안 국가들에게 있어서 경제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의
2012년 대아세안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단위: 100만 달러)	수입액 (단위: 100만 달러)
중국	204,272	195,821
일본	129,378	129,059
미국	75,547	122,930
한국	79,241	51,975
러시아	5,037	8,173

자료: 中華人民共和國 商務部 國別報告

<http://countryreport.mofcom.gov.cn>. (2013년 7월 6일 검색)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지역의 사회, 경제 인프라, 현지 인재 양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원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러시아는 중국, 미국, 일본만큼 지역에 도움이 되는 투자와 원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러시아는 지역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IV. 한반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한반도 정책의 현황

1) 2012.5 - 2012.12: 여전히 어려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회복

푸틴 대통령의 임기 첫 해에 러시아는 한반도 등거리 외교라는 기본적인 방향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북러 가스관과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철도 연결을 추진해 왔다. 블라디보스톡 APEC 회의 기간이었던 2012년 9월 8일에 열린 푸틴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을 위해 두 나라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확인한 바 있다(공감코리아정책포탈 2013). 한반도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협조이다. 이를 위해 2012년 9월 17일 러시아는 북한과 110억 달러의 채무 조정 협정에 서명했다(Valdai Discussion Club 2012). 협정에서는 전체 채무의 약 90%를 제1차로 감액하고, 나머지 10억 달러가 조금 넘는 잔여 채무는 원조로 전환할 수 있게 하였다(Yonhap News 2012). 원조 전환 부채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그리고 남북러 3자 협력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장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러시아의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러나 부채 조정 협정과 김정은 체제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가스관과 철도 연결에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북한과의 라선 지구 개발을 중심으로 한 국경 지역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중국과 비교했을 때 적극적인 투자나 협력 아젠다의 제시, 실행에서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자금과 동해로의 출구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도로와 철도 연결을 러시아보다 훨씬 많이 추진하고 있다.

<표 6> 중국의 라진 연결 철도, 고속도로 건설 현황

노선	길이(km)	예산	완공 예상
팔도-삼합-청진 (고속도로)	47	28억 위엔	2015
훈춘-첸허- 나진 (고속도로)	39	23억 위엔	2015
화룡-난핑-청진 (고속도로)	50	30억 위엔	2015
훈춘-창링즈- 블라디보스톡 (고속도로)	14	8억 위엔	2015
투먼-난양-두만강- 하산 (철도)	126	24억 3천만 위엔	2020
투먼-청진 (철도)	171.1	20억 위엔	2020
화룡-난핑-무산 (철도)	53.5	16억 위엔	2015
투먼-나진 (철도)	158.8	12억 7천만 위엔	2020

자료: (윤승현 2009, 43 ; 안성규 2010, 10)

중국은 나진항뿐만 아니라 청진항 진출도 성사시켰다. 또한 나선 지역의 또다른 항구인 선봉항과 단천항으로의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계획은 나선시의 경제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 동북 지역의 물류 수요 분산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오랜 숙원인 동해,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국의 북한 동해 항구 진출에 러시아는 2008년 나진항의 3번 부두를 중국보다 1년 먼저 선점하고 라진-하산 철로 개보수를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Cho 2012, 36).

중국의 북한 항구 진출 상황



<그림 2> 중국의 북한 항구 진출 상황

자료: (『조선일보』, 2012년 9월 11일)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주기 위해 러시아 연방정부는 2012년에 포스코에 라진항 3번 부두의 공동 개발을 제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해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인 2010년의 5.24 조치에 따른 대북 신규 투자 제한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매일경제』, 2012년 11월 23일).

2) 2013.1 - 2013.6: 시베리아 개발과 대북 정책에서의 한계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에서 한·러 관계, 러·북 관계에 대한 언급은 독립국가연합, 미국, 중앙아시아, 중국, 인도보다 한참 뒤에 있다. 그러나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개념” 4조 85항에서 러시아는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대화과 경제협력을 지지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아태 지역에서의 경제 협력을 위한 극동시베리아 경제발전은 한국, 북한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한반도 외교에 있어서 푸틴 1기, 2기와 메드베데프 체제의 틀과 기본 방향을 유지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 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 상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한국,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 일은 빅토르 이사예프 극동개발부 장관이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해서 한러 협력을 논의한 정도이다. 그 외에는 그다지 새로운 제안이나 액션 플랜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한국의 시베리아개발 참여 유도,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 한반도 정책의 문제점

1) 시베리아개발 참여 과정에서의 인센티브 문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2009년 ‘2025년 극동·바이칼 지역 발전 전략’과 중국의 동북진흥과의 연계, 2010년에는 ‘2050년 극동, 태평양 지역 발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아태 지역 국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중앙일보』, 2012년 9월 13일). 푸틴 3기 정부도 러시아연방 외교정책의 개념 4조 73항에 언급한 대로 극동시베리아 개발 추진을 아태 지역 경제협력의 주요 아젠다로 언급한 바 있다. 그 후 극동시베리아 개발 협력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외교 아젠다로 활용하고 있다. 2013년 2월 25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후해서 한반도 정세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노력의 시작은 빅토르 이사예프 극동개발부 장관의 취임식 특사 파견이었다. 그동안 미국, 중국, 일본과 달리 사전 특사 파견이 없었던 러시아가 극동개발부 장관을 파견한 것은 우리나라가 극동시베리아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외정책에서 한국의 비중을 과거에 비해 높게 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처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게 극동시베리아 개발 과정에서의 협력을 바라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러시아는 2009년부터 극동시베리아개발과 중국의 동북진흥과의 연계를 통해 러

시아에게 부족한 노동력, 자본을 보충하고 있다. 그로 인해 극동시베리아 개발 추진에 속도가 붙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지역 경제개발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자원의 대중국 에너지 수출을 통한 수출 루트 다각화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극동시베리아 지역은 중국의 천연 자원 공급 기지, 중국산 제품의 판매과 중국인들의 고용 창출 공간이 되고 있다. 반면에 현지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현지인 부족으로 인한 유능한 러시아 노동력의 구인난으로 인해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Clifford 2007; Clifford et al 201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정부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자본과 인력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특히 한국은 극동 지역에서는 이미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추진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 우리나라는 2011년 극동연방구와 93억 6천만달러의 무역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극동연방구의 전체 무역액의 2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¹⁴⁾ 반면에 시베리아연방구와는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12억 9천 6백만 달러로 전체 무역액에서 4.2%의 비중을 차지하여 8번째를 기록했다.¹⁵⁾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가 극동 지역에 비해 시베리아와의 경제 협력은 빈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 연방정부는 극동 지역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연방구에 우리나라가 더 많은 투자와 현지인들의 고용 창출에 앞장서도록 유도하고 싶어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정부와 시베리아 연방구의 지방정부가 우리 기업들에게 현지 투자시 세제 혜택과 생산 시설, 유통망 건설, 운영에 사용될 저렴한 토지 등을 제공할 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또한 시베리아 지역의 러시아인들 중에는 우리나라나 중국 근로자들보다 숙련되고 성실한 인력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인들을 많이 채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아울러 현지 인력 고용을 하더라도 업무 관련 교육에 추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정부와 시베리아 지역의 지방정부는 시베리아에 투자할 우리 기업들에

14) 駐哈巴羅夫斯克中國總領事館經濟商務室: <http://khabarovsk.mofcom.gov.cn>. (2013년 7월 13일 검색)

15) 駐哈巴羅夫斯克中國總領事館經濟商務室: <http://khabarovsk.mofcom.gov.cn>. (2013년 7월 13일 검색)

게 실질적으로 보답할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언급되고 있는 것은 2013년 6월 블라디미르 미클루셴스키 연해주 주지사가 "연해주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할 계획이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정도이다 (『매일경제』, 2013년 7월 4일). 러시아 연방정부와 시베리아의 지방정부들이 보다 명확한 투자, 현지인들의 고용 창출과 업무 교육 관련 인센티브를 제안해야 우리 기업들이 시베리아 지역에 보다 많은 투자를 비롯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2)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 부재

푸틴 3기 정부는 한반도 정책에서 남북한 등거리 외교라는 기본적인 큰 방향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이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한국, 미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것과 반해 러시아연방정부는 북한을 심하게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2013년 4월 푸틴 대통령은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나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렇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적 도발을 방지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2013년 4월 10일에는 북한과의 국경 지역을 관할하는 러시아 극동 군구 관계자가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로 날아올 경우 요격할 것임을 언급하였다(Russia Beyond The Headlines website 2013년 4월 10일). 동년 동월 12일에는 이고리 모르굴르프 외무 차관은 김영재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The Voice of Russia*, April 12, 2013). 이는 "러시아 연방 외교정책의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에서 명시한 대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아태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아태 지역의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지역인 한반도의 정세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외부의

경제 원조를 필요로 하는 북한에게는 러시아의 식량 지원과 국가 경제 건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구소련 시기의 북한 부채를 탕감해 준 바 있다. 그리고 나진-하산 철로 완공으로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의 경제 협력 강화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갖추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게 필요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V. 결론 및 전망

푸틴 3기 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정책은 프리마코프의 동방정책에서의 유라시아 지역 중시와 균형외교에서 보다 진전된 형태인 푸틴 1기, 2기 정부의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정책을 꾸준히 계승하고 있다. 또한 2008년 9월 12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메드베데프 총리가 강조했던 아시아 벡터와 유럽 벡터를 모두 중시하는 동방정책의 기조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1기, 2기 때의 동아시아를 유럽에 대한 세력균형을 위한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했던 것보다는 유럽과 동등한 축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백준기 2009, 182). 이는 동아시아 관련 대외 전략과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푸틴과 메드베데프, 관료들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화론, 지리경제학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우준모 2005, 264). 또한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에서는 중국과 함께 하는 다자안보 체제를 제안하고 있고 한반도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구소련 시기의 브레즈네프 서기장 때부터 강조하던 다자주의 외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러시아가 다자주의 외교 전략을 활용하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서 경제, 안보 분야의 비중이 미국, 중국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자 협력, 다자간 대화 채널 활용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푸틴 3기의 첫 1년 동안 러시아가 외교정책의 개념에서 언급했던

기존의 외교안보 대화 채널의 적극적 활용, 새로운 아태 지역 안보 메커니즘의 구축은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극동시베리아 개발은 2009년 9월 중국의 동북진흥과의 연계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동력 진출로 예전보다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꾸준한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고 한국, 일본 기업과 자본의 참여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푸틴 3기 정부는 중국과 일본의 새 정부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과의 협력 강화, 일본 아베 정부와 일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검토, 북방영토 협상의 재개를 이끌어 냈다. 또한 베트남과도 캄란만의 러시아 군기지 재설치 문제를 제외한 안보 협력과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경제 협력 강화와 북방 4개 섬 협상 재개, 베트남과의 협력 증진은 푸틴 3기 정부 1년 동안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과 동남아시아에서의 협력 추진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장애 요소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몽골에서는 몽골의 외국 자본에 대한 광물자원 투자 지분 제한으로 인해 러시아가 몽골 광물자원 관련 프로젝트를 새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아세안+3(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과 관련된 협력에 있어서는 동아시아 정상회담과 G20, ASEAN 관련 대화 채널들의 활용 외에는 보다 실질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놓지 못한다면 첫 1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는 2012년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바탕으로 한 현상 유지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임기 첫 해인 2012년과 2013년 2월에 “러시아 외교 정책의 개념”이 나온 이후에도 러시아의 한국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제고되지 않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영향력 제고에 필요한 프로젝트들이 실행되지 않고 있고 러시아의 대한반도 경제적, 외교적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외교, 경제적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남북러 가스관과 시베리아철도와 한반도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극동시베리아 개발의 참여 유도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북한의 미사일 위협 이후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러시아는 미국, 중국에 비해 비중이 여전히 적다. 북한은 경제적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다양한 루트로 북한에 불만을 표시하고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령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후에야 군사적 언행을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지 못하면 러시아는 푸틴의 남은 임기 동안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제고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까지 러시아는 오랜 동맹국인 미국,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보다 안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도 떨어진다.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는 2011년 212억 달러, 2012년 225억 달러로 중국(2011년: 2,456억 달러, 2012년: 2,151억 달러), 미국(2011년: 834억 9,951만 달러, 2012년: 1,019억 달러)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2013. 관세청). 또한 안보 분야에서도 러시아와 무기교역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기업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여전히 중요한 국가인 러시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러시아와 북한-중국-러시아 동부국경지역 경제 협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북·중·러 동부국경지역은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건설로 인해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 라진항 부두 확보와 철도와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에 비해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금과 기술이 러시아와 연계되면 극동시베리아 - 북·중·러 동부 국경 지역이 우리 제품의 생산,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러시아가 2012년에 포스코에 제의한 바 있는 라진항 3번 부두의 공동 개발은 현 정부에서 추진을 검토해야 할 사업이다. 라진항 3번 부두 공동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러시아와 우리나라는 극동시베리아 지역과 북한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팽창을 조절할 수 있는 실익을 공유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와 각급 정부, 기업들은 우리와의 공조를 바라고 한반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러시아를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

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컨대 현지 상주인구의 부족으로 중국 자본 외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연해주의 농업 개발에 우리나라 기업과 자본이 러시아 기업과 컨소시엄을 맺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우리나라와 러시아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로 북한의 과도한 군사적 행동을 막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러시아와의 정보 공유와 꾸준한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단독으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미국과의 사안별 협력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 해군의 태평양함대와 극동관구의 공군, 육군은 최근 러시아 국방부의 아태 지역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전투력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소비에트 시기부터 중국에 비해 한반도 통일과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북상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대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보다 적극적이고 실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안보 분야에서도 무기 교역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협의를 거친 후에 러시아와 양국의 정부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안보 관련 회담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안보협의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협력을 실행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중국을 유사시 견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국내문헌

- 김성진(2013). “러시아 푸틴/메드베데프 정부의 대외정책: 지속성과 변화.” 『중소연구』. 제36권. 제4호, pp. 241-275.
- 김유은(2010). “푸틴의 공세적 외교정책과 러시아의 동북아 다자안보에 대한 입장.” 『중소연구』. 제34권. 제3호, p. 124.
- 문정인·서승원(2013). “7장 일본과 러시아.”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 하는가?』. 삼성경제연구소, pp. 300-339.
- 백준기(2009). “러시아의 중국정책의 재정립과 이행기적 특성: 과정과 요 인.” 『중소연구』. 제33권. 제3호, pp. 182-189.
- 신범식(2001). “러시아: 유라시아주의와 아틀란티스주의 사이에서.” 『역 사비평』. 제54호, pp. 83-95.
- 신범식(2013). “푸틴 3기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변화하는 동북아에서의 적극적 역할 모색.”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제1호, pp. 123-161.
- 안성규(2010). “중 ‘동해 길 뚫어라’... 나진행 도로·철도 개발 ‘올인’.” 『중앙선데이』. 제177호, p. 10.
- 오영일(2013). “위협받는 한국의 러시아 극동 진출 전략.” 『친디아플러스 스』. 포스코경영연구소. 제82호, pp. 58-59.
- 우준모(2005).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 유라시아주의의 확립과 실현.” 『국제정치논총』. 제45집. 제1호, p. 264.
- 윤승현(2009). “두만강 유역 개발의 현황과 시사점.” 『한중사회과학연 구』. 제5권. 제2호, p. 43.
- 정은숙(2004). “러시아의 신안보환경과 극동군사력 (1992-1994).” 『러시 아 외교안보정책의 이해: 고르바췌프에서 푸틴까지』. 세종정책 총서 2004-1, pp. 153-161.
- 제성훈(2010). “탈냉전기 러시아-몽골관계의 변화: 지정학적 완충국 개념 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0집. 제2호, p. 181.
- 제성훈(2012). “3기 푸틴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결정요인과 전망.” 『내일

- 을 여는 역사』. 제49호, pp. 109-126.
- 홍완석(2001). “푸틴 시대 러시아의 신한반도 전략-분석과 대응.” 『한국 정치학회보』. 제49호, pp. 343-363.
- 강승아. “[한국의 새로운 실크로드, 극동 러시아] ① 국내 최초 인터뷰 극동개발부 사나코예프 장관 보좌관이 밝힌 극동개발 방향.” 『부산일보』. 2013년 7월 4일.
- 김성훈·김정환. “러시아 “北 나진항 공동개발 하자”…포스코에 러브콜.” 『매일경제』. 2012년 11월 23일.
- 매일경제 특별취재단. “극동러시아 9개 주정부, IR서 러브콜 “한국 기업 오세요.”” 『매일경제』. 2013년 7월 4일.
- 매일경제 특별취재단. “외국인투자 지원 협의회에 韓영사도 참가.” 『매일경제』. 2013년 7월 4일.
- 박민희. “푸틴, 북방 4개 섬 분할 제안.” 『한겨레』. 2013년 5월 2일.
- 배극인. “아베, 29~30일 러 방문… ‘쿠릴 4개 섬 대타협’ 나올까.” 『동아일보』. 2013년 4월 3일.
- 이영욱. “몽골대통령 재선 외국인투자 가속.” 『매일경제』. 2013년 6월 27일.
- 이용수. “中, 北청진항도 진출… 5개港(나진·청진·선봉·단천·원산항) 확보 전략.” 『조선일보』. 2012년 9월 11일.
-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푸틴의 ‘블라디 사랑’ 동북아 선점 겨냥해 러시아 동부 수도로.” 『중앙일보』. 2013년 9월 13일.
- 청와대(2012). “한·러, ‘남-북-러 가스관’ 사업 적극 협력.” 공감코리아 대한민국 정책포탈. 2012년 9월 9일.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738882>.
(2013년 2월 25일 검색)

□ 외국문헌

- Nogee and Donaldson(1995). 『소련외교정책론 1945~1991』. 김의곤 역. 인하대학교 출판부, pp. 245-246.
- Akihiro, Iwashita(2013). "The Northern Territories and Russo-Japan

- Relations." *Russian Analytical Digest*. No.132, pp. 2-4.
- Cho, Jungwon(2012). "The Conflict, Cooperation, and Competition of Sino-Russian Relations: Focused on Tumen River and the East Sea." *Eurasian Review*. Vol. 5, pp. 57-58.
- Clifford, Gaddy G.(2007). "An Impossible Trinity?: Resources, Space and People." *Foreign Service Journal*. April, pp. 33-38.
- Katz, N. Mark(2006). "Primakov Redux? Putin's Pursuit of "Multipolarism" in Asia." *Demokratizatsiya*, Vol. 14. No. 1, pp. 144 - 151.
- Ko, Jaenam and Seungwhan Choi(2002). "Russia's South Korea Policy: A Comparison of Soviet and Post-Soviet Dynamics." *East Asian Review*. Vol. 14. No. 2, p. 45.
- Mikheev, Vasily(2001). "South-North Reconciliation and Prospects for North Korea-Russia Relations." *Asia Perspective*, Vol. 25. No. 2, pp. 320-350.
- Seung, Ham Yang, Woosang Kim and Yongho Kim(2004). "Russo-North Korean Relations in the 2000s: Moscow's Continuing Search for Regional Influence." *Asian Survey*. Vol. 44. No. 6, pp. 794-814.
- Yoshinori, Takeda(2006). "Putin's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6, pp. 189 - 207.
- Batbuyan, Ulziibayar. "Mongolian Parliament Approves Amendments to Strategic Sectors Foreign Investment Law." *Research Note*. April 22, 2013.
- Chongkittavorn, Kavi. "Asean back on Russia's map as a region of interest." *The Nation*. May 20, 2013.
- Krainova, Natalya. "Military Holds Largest Maneuvers Since Soviet Era." *The Moscow Times*. July 17, 2013.
- Clifford, Gaddy G. and Barry Ickes(2013). "Bear Traps on Russia's

- Road to Modernization." *Routledge*, pp. 57-134.
- "North Korea Signs Debt Rescheduling with Russia in Moscow." North Korea Newsletter. NO. 228. *Yonhap News*. September 20, 2012.
- Trenin, Dmitry, Maria Lipman and Alexey Malashenko. "The End of an Era in EU-Russia Relations." *Carnegie Endowment*. May 13, 2013.
- Wishinick, Elizabeth(2002). "One Asia Policy or Two? Moscow and the Russian Far East Debate Russia's Engagement in Asia." *NBR Analysis*, p. 100.
- "Analysis : Bargaining looms over Russian LNG exports to Japan." *The Asahi Shimbun Asia & Japan Watch*. April 30, 2013.
http://ajw.asahi.com/article/behind_news/politics/AJ20130430009
5. (2013년 6월 28일 검색)
- "Baikal-Amur Mainline Railway will be reconstructed." ITAR-TASS website.
<http://www.itar-tass.com/en/c142/559858.html>. (2013년 7월 12일 검색)
- "China's Xi Jinping urges for stronger investment, high-tech ties with Russia." RT.com.
<http://rt.com/news/china-russia-xi-putin-731>. (2013년 7월 28일 검색)
- "Despite grow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Russian forces in Far East have not been put on alert." Russia Beyond the Headlines website, April 10, 2013.
http://rbth.ru/news/2013/04/10/despite_growing_tensions_on_the_korean_peninsula_russian_forces_in_far_e_24853.html. (2013년 4월 10일 검색)
- "Medvedev calls for stronger oil, nuclear ties with Vietnam." Thanh Nien News Website.

<http://www.thanhniennews.com/2010/pages/20121106-medvedev-says-russia-wants-stronger-military-relation-with-vietnam.aspx>. (2013년 6월 30일 검색)

“Russia urging North Korea to resume talks.” *The Voice of Russia*. April 12, 2013.

http://english.ruvr.ru/2013_04_12/Russia-urging-North-Korea-to-resume-talks. (2013년 4월 13일 검색)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В.В.Путин провёл рабочую встречу с главой «Газпрома» А.Б.Миллером.” АРХИВ САЙТА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В.В.ПУТИНА. <http://archive.premier.gov.ru>. (검색일: 2013년 7월 19일)

宋效峰(2012). “亞太格局視角下俄羅斯的東南亞政策.” 『東北亞論壇』. 第2期, pp. 43-46.

許志新(2005). “俄羅斯的亞太政策.” 『当代亞太』. 第2期, pp. 11-17.

邢广程(2012). “俄羅斯亞太戰略和政策的新變化.” 『國際問題研究』. 第5期, pp. 103-111.

商務部綜合司 商務部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2013). “2012年俄羅斯貨物貿易及中俄雙邊貿易概況,” pp. 13-15.

“專家解讀習近平主席訪問俄羅斯成果.” 『新華網』. 2013年 4月 3日.

http://news.xinhuanet.com/world/2013-04/03/c_124537249_2.htm. (2013년 4월 9일 검색)

“中俄雙邊貿易額預計2020年將達兩千億美元.” 『新華網』. 2013年4月16日.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3-04/16/c_115412689.htm. (2013년 5월 27일 검색)

“專家：中俄能源合作是“互利共贏”而非“附庸.” 中新財經報道.

<http://finance.chinanews.com/ny/2013/05-31/4876716.shtml>. (2013년 5월 31일 검색)

“俄羅斯醋意十足 抱怨中國在遠東忘恩負義.” 『多維新聞』. 2012年 8月 16日. <http://china.dwnews.com/news/2012-08-16/58802607.html>.

(2013년 1월 5일 검색)

老任. “美國与俄羅斯爭奪越南金蘭灣拉開戰幕.” 『人民网』. 2012年 7月 30日. <http://world.people.com.cn/n/2012/0730/c1002-18625612.html>. (2013년 4월 30일 검색)

“俄羅斯計劃增加對中國石油出口 或借道蒙古供油.” 『新華能網』. 2013年 4月 30日. <http://www.ineng.org/news/10745.html>. (2013년 5월 20일 검색)

駐叶卡捷琳堡總領館經商室. “今年1-3月中國繼續為西伯利亞聯邦區最大貿易伙伴 (2013年 7月 11日).”
<http://ekaterinburg.mofcom.gov.cn/article/jmxw/201307/20130700196500.shtml>. (2013년 7월 13일 검색)

鈴木拓也・駒木明義・江洲崇(2013). “停滯日口、打開探る 領土交渉、認識に溝も 經濟協力は互いに強調 首腦會談.” 『朝日新聞』. 4月 30日.

石川陽平. “北方領土打開へロシア保守層の壁 新たな讓歩困難.” 『日本經濟新聞』. 2013年 4月 30日.

“«Газпром» и Китай подписали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по поставкам газа по «восточному» маршруту.” Газпром.
<http://www.gazprom.ru/press/news/2013/march/article158673>. (2013년 7월 19일 검색)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ѣх Дел (2013).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mid.ru/brp_4.nsf/0/6D84DDEDEDBF7DA644257B160051BF7F. (2013년 7월 20일 검색)

□ 인터넷 자료

관세청. www.customs.go.kr. (2013년 6월 23일 검색)

공감코리아정책.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738882>
(2013년 6월 28일 검색)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중앙정부. <http://cn.news.gov.vn>. (2013년 6월 27일 검색)
- 多維新聞 . <http://china.dwnews.com>. (2013년 1월 5일 검색)
- 中新財經報道. <http://finance.chinanews.com>. (2013년 5월 31일 검색)
- 中國石化新聞網. <http://www.sinopecnews.com>. (2013년 5월 16일 검색)
- 中華人民共和國 商務部 國別報告. <http://countryreport.mofcom.gov.cn>. (2013년 7월 6일 검색)
- 人民網. <http://world.people.com.cn>. (2013년 6월 30일 검색)
- 新華網. <http://news.xinhuanet.com>. (2013년 4월 9일 검색)
- 新華能網. <http://www.ineng.org>. (2013년 5월 20일 검색)
- 駐叶卡捷琳堡中國總領事館經濟商務室. <http://ekaterinburg.mofcom.gov.cn>. (2013년 7월 13일 검색)
- 駐哈巴羅夫斯克中國總領事館經濟商務室.
<http://khabarovsk.mofcom.gov.cn>. (2013년 7월 13일 검색)
- АРХИВ САЙТА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В.В.ПУТИНА. <http://archive.premier.gov.ru>. (2013년 6월 12일 검색)
- ASEAN. <http://www.asean.org>. (2013년 6월 28일 검색)
- BBC. <http://www.bbc.co.uk>. (2013년 5월 7일 검색)
- Brookings. <http://www.brookings.edu>. (2013년 4월 8일 검색)
- Embass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Mongolia.
<http://www.mongolia.mid.ru>. (2013년 6월 27일 검색)
- Itar-tass. <http://www.itar-tass.com>. (2013년 7월 12일 검색)
- JETRO. <http://www.jetro.go.jp/en>. (2013년 6월 18일 검색)
- MGIMO ASEAN Center. <http://www.asean.mgimo.ru>. (2013년 6월 17일 검색)
- Russia Beyond The Headline. <http://rbth.ru>. (2013년 6월 15일 검색)
- Россия~ASEAN. <http://russia-asean.com>. (2013년 7월 10일 검색)
- RT. <http://rt.com>. (2013년 7월 12일 검색)
- Thanh Nien News. <http://www.thanhniennews.com>. (2013년 6월 27일 검색)

The Asahi Shimbun Asia & Japan Watch. <http://ajw.asahi.com>. (2013년 6월 30일 검색)

Valdai Discussion Club. <http://valdaiclub.com>. (2013년 7월 10일 검색)

Voice of Russia. <http://english.ruvr.ru>. (2013년 4월 13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3년 07월 15일 |

| 논문심사일 : 2013년 08월 05일 |

| 게재확정일 : 2013년 08월 16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0, No. 2 (2013)

**Russian Foreign Policy towards 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in the Third Term of
Vladimir Putin's Presidency:
Focusing on the First Year**

Jung-Won Cho

(Inha Univ.)

Russian Foreign Policy towards East Asia and Korea peninsula in the third term of Vladimir Putin succeeds the pragmatic foreign policy in the first and second term of his presidency. Also, Vladimir Putin continues to keep the former President Medvedev's Eastern Policy which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Asia and Europe equally. Moreover, Putin accelerates Far Eastern Russia and Siberia Development through the Chinese bold investment and inflow of workforce, and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Japan, Republic of Korea. However, Putin does not implement more concrete policy about Russia-ASEAN relation and ASEAN+3 (member states of ASEAN, China, Japan, Republic of Korea) in Southeast Asia, even though Russia has participated in East Asian Summit and utilized dialogue channels of G20 and ASEAN. Until now, Russian policy on Korean Peninsula maintains a status quo. It originates from the inefficient process of economic projects about Korean peninsula, for example, the construction of gas pipeline and the connection between Trans Siberian Railway and Korean peninsula railway. Unless Russian Federal government

shows more concrete policies, Russia would not be able to increase her influence power on 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Key words: Putin's Third Term, Russia, Foreign Policy, East Asia, Korean Peninsula